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과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 아시아·태평양 평화공영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 -

김 종 욱*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네트워크 국가’
- III. 한반도 평화공영 구상과 실현방안
- IV.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 공동번영권의
‘네트워크 국가’
- V.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미래비전과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정학,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심화와 실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경제적 변화 등과의 전체적인 연관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제화되었으며, 동아시아지역의 연계 속도가 심화됨에 따라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담론의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인 지역정치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세계화의 심화는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발전으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에 있어 동아시아지역의 부흥과 세계화의 귀결로서 ‘아태화(亞太化)’ 흐름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개될 세계적 상황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아시아지역은 기회요인과 동시에 복잡한 위험요인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출발점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판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적 번영의 양 가치를 접합하는 방향에서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의 비전과 내용을 정리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와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연계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즉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동아시아공동체, 아태 지역체계의 ‘이종적(heterogeneous) 네트워크’에서 아태지역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제공할 수 있는 ‘중추(hub)’로서 ‘네트워크 국가’를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의 비전이 실천된다면 평화롭게 번영을 추구하는 동아시아공동체 건설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아태지역을 경제영토로 활용하는 새로운 비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동아시아 공동체, 네트워크 국가,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유사영토, 중추국가

*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I. 서론

이 글은 한국의 미래비전과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정학,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심화와 실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경제적 변화 등과의 전체적인 연관 속에서 접근해야만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제화되었으며, 동아시아지역의 연계 속도가 심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담론의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인 지역정치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세계화의 심화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으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북한 문제는 남북 양자의 문제를 넘어서 6자회담의 다자구도에 의해 다뤄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국가 이익 및 지역전략에 의해 요동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 핵문제 관련 당사자로서의 레버리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 핵문제의 논란은 ‘북한 붕괴론’으로 확산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복잡하고 중층적인 문제로 진화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은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3’로 대변되듯 지역공동체 구상을 위한 초기적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G-2로 부상한 중국이 있으며, 일본도 지역 차원의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결과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부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의 부흥은 대서양 중심의 세계경제에서 태평양 중심의 세계경제로 축을 옮겨놓는 과도기를 상징한다. “태평양 횡단 교역량이 대서양 횡단 교역량을 두 배 이상 능가한 지 오래고, 21세기 초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5개국의 GDP 합계는 유럽연합 27개국의 GDP 합계를 이미 앞질러 미국까지도 위협하고 있다.”¹ 이제 동아시아지역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으며, 세계경제의 기관차가 되어 가는 실정이다. 이런 흐름은 한국이 21세기 미래비전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환경으로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세계경제에 있어 동아시아지역의 부흥과 세계화의 귀결로서 ‘아태화(亞太化)’ 흐름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개될 세계적 상황은 한국에게 있어 새로운 기회를 의미한다.²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은 이런 기회요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위협요인

¹ “2009년 기준으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5개국의 GDP 합계는 약 11.3조 달러, 유럽연합 27개국의 GDP 합계는 약 10.7조 달러, 미국은 약 14조 달러다.” 황태연, 『공자와 세계 1: 공자의 지식철학(상)』 (파주: 청계, 2011), p. 50.

트위크 국가를 통해 아태지역을 개척하는 ‘프론티어(frontier)’적 개척정신을 통해 한반도의 비전을 구상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한반도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고 싶은 것이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하다.

II. 이론적 배경 :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네트워크 국가’

1.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와 한국의 위치

동아시아지역은 과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제2의 갈등 전선, 미발전된 지역(일본 제외)으로 서양의 변방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제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은 주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했고, 동아시아는 경제의 용광로·기술의 보고로서 이미지가 변화되었다. 특히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데니스 와일더(Dennis Wilder)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은 미국 경제이익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 우선’ 접근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⁵ 2008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현 흐름이 지속된다면 2025년경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가질 것이며 지도적인 군사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⁶ 이미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앞질렀고 실질적인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다.⁷ 이제 중국은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핵심국가로 등장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의 시대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태지역으로 국제정치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한국, 중국, 일본을 필두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며, 국제질서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변화추세와 관련하여 동북아 및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은 이 지역 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는 과거 역사문제와 현재의 경제적 부흥이 중첩되어 나타나면서 공동체 건설문제가 부각되고 있다.⁸ 신타래처럼 꼬인 과거 역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⁵ Dennis Wilder, “How a ‘G-2’ Would Hurt,” *The Washington Post*, Apr 2, 2009 (A.21), <http://www.brookings.edu/opinions/2009/0402_china_wilder.aspx> (검색일: 2011.2.15).

⁶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NIC 2008-003 (November 2008), p. 29, <www.dni.gov/nic/NIC_2025_project.html> (검색일: 2011.2.15).

⁷ 일본 내각부가 지난 2월 14일 2010년 기준 달러 환산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5조4742억 달러(약 6180조원)라고 밝히면서 중국(5조8786억 달러)이 명실상부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아시아경제』 2011년 2월 15일.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선결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통의 분모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토대 위에 동아시아 공동체는 구상에서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쑨거(孫歌)는 동아시아를 하나의 총체로 조합해 통일체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는 그 자체가 냉전의 축소판이 되었고 한국전쟁이 조장되고 발발됨에 따라 한반도에 철의 장막이 본격적으로 펼쳐졌으며, “한국-일본-타이완’과 ‘소련-중국-북한-몽골인민공화국’은 줄곧 동일한 이데올로기를 향유할 수 없는 사회 대립과 정신적인 격렬 상태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⁹ 이러한 역사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이후 “국민(민족)국가 단위의 자국 중심 사고가 초래한 대립과 분쟁을 동아시아가 해결해 줄 것”으로, “서구적 근대에 대한 ‘탈근대적 대안’을 동아시아에서 찾”으려는 모색으로, “자본주의에 맞서는 유력한 수단을 동아시아 공동체가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¹⁰

그러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앞에는 다양한 난제가 놓여 있다. 우선, 역사문제·영토문제·지역 현안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공통의 분모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인종·종교적 차이, 국가 간 이익을 둘러싼 분쟁, 전쟁에 의한 가해국과 피해국의 존재 등을 용해할 공통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다. 둘째, 지역공동체 구성에 있어 불균형성의 심화와 위계적 구조화의 가능성이다. 한·중·일 3개국의 규모는 ‘초대형 공룡’의 모습을 보일 것이며 이에 따른 강대국 위주의 공동체 재편은 지역 국가들의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이다.¹¹ 셋째, 지역공동체 구축과정에 있어서 서구 및 동아시아지역 국가 내부에서 제기되는 ‘중국위협론’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이 문제는 다음 문제와 즉각적으로 연동된다. 넷째,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과 미국의 관계문제이다. 즉 여전히 존재하는 동맹구조와 지역공동체 구상을 어떻게 연계

⁸ 1997~1998년 아시아 재정위기 국면은 지역공동체 구축의 중요성과 그 방향에 대한 명백한 이동의 근거를 제공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APEC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지역 재정위기 대응에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Richard Weixing Hu, *Building Asia Pacific Regional Architecture: The Challenge of Hybrid Regionalism*, Center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dies (The Brookings Institution, July 2009), pp. 5-6.

⁹ 쑨거, “동아시아 시각의 인식론적 의의,” 『동아시아, 인식지평과 실천공간』 (서울: 아연출판부, 2010), pp. 48-49.

¹⁰ 박상수, “한국발 ‘동아시아론’의 인식론 검토,” 위의 책, pp. 139-140.

¹¹ 백낙청은 한·중·일 세 나라의 결합으로 인해 ‘초대형 공룡’화를 우려함과 동시에 이렇게 결합된 지역공동체는 세계민중과 지구 환경에 엄청난 해악을 양산할 것으로 우려한다. 류준필, “분단체제론과 동아시아론,” 위의 책, p. 183.

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문제는 향후 지역공동체 구성과 관련 상당한 논란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이데올로기적 대립 구도로 인해 동아시아 공동체로 포괄되지 못하는 국가들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의 문제다. 북한과 타이완의 문제는 공동체 구성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다.¹²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문제는 공동체 구성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자주적 발전과 화해협력의 전진은 동북아 지정학에 지대한 긍정적 역할을 미칠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의 지역공동체와 평화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반도 문제가 지니고 있는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지정학의 의미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북한 문제와 동시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핵심 고리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평화체제 구축이 동아시아지역의 안정뿐만 아니라 번영에도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긍정적 기여를 통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실행방향은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며, 이 과정은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체제 실현과 통일을 가능케 하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순환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가령 ‘동아시아문화경제공동체(CECEA: Cultural and Economic Community of East Asia)’와 같은 연대구조를 만들어 상호간의 선린유대와 공동번영의 항구적 틀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통일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¹³ 현재 지역공동체가 주로 경제적 영역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경제적 상호의존의 확대가 지역 공동체 구성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나, 동아시아 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즉 국제정치의 국민국가 중심적 사고와 서양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이 “독자적인 지정학적·문화론적 조건을 공유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존속해온 시공간”으로서의 어떠한 문명을 현대에 맞게 갱신할 필요가 있다.¹⁴ 이것은 한국의 미래비전과 관련 두 가지 지점을 함축한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 통합을 선

¹² “동아시아 공동체가 지역 내 일부 부자나라들의 클럽이 되지 않도록 북한이나 ‘국가와 비국가의 중간’에 위치한 타이완 같은 주변적 존재들을 포용할 장치가 요구된다.” 백영서, “동아시아론과 근대적응·근대극복의 이중과제,” 『창작과 비평』, 제36권 제1호 (2008), p. 51.

¹³ 황태연, 『공자와 세계 1: 공자의 지식철학(상)』, p. 68.

¹⁴ 백영서, “동아시아론과 근대적응·근대극복의 이중과제,” p. 41.

자 관점적 정치체(multiperspectival polity)’로서 구성된 EC로 인해 변화가 촉진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초(超)국가화 된 미시경제 연계의 세계 시스템 연결망들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경제에서 비영토적 ‘지역(a nonterritorial region)’의 창출에 기인했다.¹⁷ 따라서 과거에는 영토문제가 중요했다면 이제 점차적으로 네트워크를 둘러싼 통제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¹⁸ 이러한 변화의 추동력은 세계화였다.

세계화 현상은 기존 국가성격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¹⁹ 세계화에 적응 또는 대응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통합의 흐름과 국가 내외부의 다양한 거버넌스(governance)의 출현으로 나타났다.²⁰ 그러나 통합과 거버넌스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점과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 즉 세계화는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세계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과정에 의해 생산되고 형성되는 것인데, 이는 모든 국가의 정부와 인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양산한다. 카스텔(Castells)은 세계화가 더욱 촉진되면 될수록 세계화로 인해 야기된 모순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이유는 민족 국가는 여전히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민족국가의 이익을 강제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또한 각 국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회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정부 간 정책결정과정은 교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²¹

¹⁶ John Gerard Ruggie, “Territoriality and Beyond: Problematizing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7, No. 1 (Winter 1993), p. 168.

¹⁷ *Ibid.*, p. 172.

¹⁸ 즉 네트워크의 범주와 특징에서의 고려할만한 변화가 발생하면서, 네트워크는 어떻게 출현하는가, 어떻게 기능하는가, 어떻게 지속되는가, 어떻게 규정되는가, 어떻게 변형되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Thomas J. Biersteker, “State, Sovereignty and Territory,”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SAGE, 2002), p. 172.

¹⁹ 세계화는 재정 시장의 세계적 상호의존성과 다국적 기업과 그 기업을 보조하는 네트워크의 핵심을 둘러싼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관리·분배의 국제화로서 세계경제의 존재, 상호의존적이고 다층화 된 시스템 내의 세계적·지역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상호관계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세계적 미디어 시스템, 지속 불가능한 발전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특징지어지는 지구적 이슈로서 환경 관리, 인권의 세계화, 국제테러·대량살상무기 등 전 지구적으로 공유된 문제로서 세계 안보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Manuel Castells, “Global Governance and Global Politic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January 2005, p. 10, <http://arkkitehtuuri.tkk.fi/YKS/fin/opetus/kurssit/yks_teorialuennot/Castells/2005Global-Castellas.pdf> (검색일: 2011.4.2).

²⁰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적 통합의 양상은 다목적적·구조적으로 정의된 EU (European Union), 무역문제 등 일련의 이슈에 집중하는 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조정과 분쟁의 공간으로서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또는 ASEAN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Ibid.*, p. 11.

²¹ *Ibid.*, pp. 10-12.

즉 세계화에 의해 주권으로 표상되던 권력과 권한은 비(非)국가단위체나 초국가기구로 분산·공유되는 것과 함께,²² 이러한 분산·공유된 구조를 주권을 상징하는 국민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두 가지의 상반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세계화 시대의 도전에 대한 국민국가의 ‘적응적 자기변신’이며, 혼란스러운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세계화의 전면화는 국민국가의 시대를 넘어서 ‘적응적 자기변신’으로서 ‘네트워크 국가’의 출현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국가는 “국내제도와 정책결정의 공유된 ‘연결망’을 특징”으로 하며, “정치적 과정이 이루어지는 사슬모양의 연결망은 근대국가의 전통적인 위계질서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네트워크 모양”을 띠게 된다.²³ 네트워크는 그 자체 위계적 질서가 아니라 수평·수직의 복합적이고 중첩된 ‘다층질서(heterarchy)’를 만들어 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적 자기변신’을 통해 출현한 네트워크 국가는 “수많은 사회 네트워크와 비국가기구들 사이에서 촉진자 또는 중재자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세계화시대에도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과시한다.”²⁴ 이러한 흐름은 국내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다양한 초국가적·초정부적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가운데 네트워크 국가가 이에 대한 촉진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는 외부의 변화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영토의 경계를 넘어서 국제적·지역적·초국적 차원의 제도적 연결망을 구축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국가는 안과 밖이 상호침투하고 다차원적이고 유동적인 경계를 가진 시스템이며, 정부 간 네트워크의 형태를 띤다.²⁵ 네트워크 국가모델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네트워크의 중심성’의 제공인데,²⁶ 이를 지역 공동체에 적용하면 위계적 구조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심성을 제공하는 ‘중추(hub)’로서의 역할 제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지점에 착안하여, 동아시아지역의 지정학적 복잡성이라는 측면과 세계화 시대의 전면화에 의한 국가 안팎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국적·국내적 차원의 ‘이중적 네트워크’

²² Susan Strange, *The Retreat of the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민병원, “세계화시대의 네트워크 국가,” 『네트워크 지식국가』 (서울: 을유문화사, 2007), p. 485에서 재인용.

²³ 위의 책, p. 493.

²⁴ 위의 책, pp. 496-497.

²⁵ 김상배, “네트워크 지식국가론의 모색,” 위의 책, pp. 534-536.

²⁶ Christopher K. Ansell, “The Networked Polity: Regional Development in Western Europe,” *Governance*, 13 (3), p. 309; 위의 글, p. 537에서 재인용.

가 광범위하게 형성·확산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심성을 제공하는 ‘중추’로서의 네트워크 국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 전개할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아태지역의 중추로서 네트워크 국가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Ⅲ.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과 실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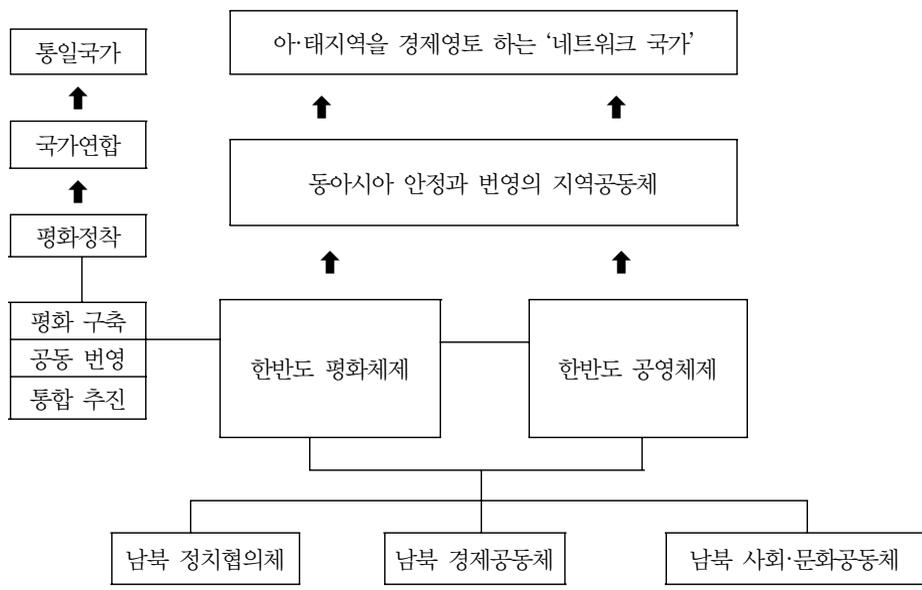
1.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은 남북관계의 답보상태로 인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시절 ‘동북아시아대 구상’으로 제시된 전략을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으로 확대하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한국의 미래비전을 새롭게 조정하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의 추진은 단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촉진 및 아태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가. 개념, 기본방향 그리고 핵심원칙

한반도 평화공영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공동번영체제의 구축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성과정에서 한국의 책임의식을 발휘하고,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자는 것이다. 즉 한반도의 평화 및 공동번영 추구하고 연계하여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성 및 아태지역을 주(主)무대로 하는 네트워크 국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구상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도



한반도 평화공영체제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자주, 평화, 민주의 통일 3원칙과 ‘7·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그 기본 방향을 평화구축(peace construction), 공동번영(co-prosperity), 통합 추진(promoting integration)으로 설정하여 항구적 평화(constant peace)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통일을 지향하지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평화를 그 기본 축으로 하되, 남북한 국민들 모두가 요구하는 상생의 공동번영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통합을 추진하지는 것이다. 공동체적 지향이 단지 분단된 민족의 통일이라는 당위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공히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가운데 남북 국민들의 희생이 아니라 복지를 구현하는 가운데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공영체제는 다음의 핵심원칙을 따른다. 첫째, 평화와 공영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평화를 위해 경제를 포기할 수 없으며, 평화 없는 안정적인 경제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경제문제는 이미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 문제를 등한시하고 진행되는 통합은 내부적 합의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막대한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 둘째, 상생과 호혜에 입각한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공동 협력 사업은 남북한이 처한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공통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적인 보편가치를 결합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보편인권, 법의 지배 등으로 지칭되는 세계화의 보편적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처한 현실과 능력, 그리고 남북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반영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한반도와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심화시키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통합과정이 아태지역과의 연계성을 심화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공영체제가 향후 이 지역에서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국 사회 내부의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사회 구성원의 지지와 동시에 다양한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²⁷

나. 기본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의 구축과정은 ‘1단계 평화정착 → 2단계 국가연합 → 3단계 통일국가’로 설정한다. 과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완전통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은 ‘남북연합, 남북연방, 완전통일’이었다. 이미 6.15 남북공동성명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정신에 근거해서 ‘평화정착, 국가연합, 통일국가’의 3단계로 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1단계 ‘평화정착’은 북핵 문제의 해결 그리고 남북관계의 안정화·제도화로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주대표부가 설치되고, 남북공동시장 형성 및 각종 경제협력사업 프로젝트에 기초한 남북경제공동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남북협회는 남북정치협의체, 남북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의 3개 부문 협력 레짐을 구성하고, 그 하위에 각종 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 2단계 ‘남북연합’은 연합기구 구성으로서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각종 사무처 및 남북군축기구 및 핵통제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화폐·통화동맹, 단일 중앙은행, 재산권 확립, 통행·통상·통신협정 등이 발

²⁷ 예로 들면, 2009년 11월 국민여론조사에서 북핵 폐기를 전제로 대규모 대북경제지원에 대해 65.6%의 국민이 적극 찬성 또는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진욱, 『국민들의 대북인식 변화와 대북정책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29.

효·실행되는 경제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물자·정보의 자유 이동 및 문화교류 활성화, 교육제도 통합, 의료·연금·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는 남북사회·문화공동체도 작동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진적 과정을 거쳐 3단계 ‘통일국가’는 통일헌법 제정, 단일정부, 단일군대 등의 국가모습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즉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사회적 측면에서의 한반도 공영체제가 유기적으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남북정치협의체’, ‘남북경제공동체’, ‘남북사회·문화공동체’를 통해 평화와 번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한반도 평화공영체제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에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이며, 동시에 세계경제의 중심이 된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다. 이는 역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진전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의미한다. 과도한 예측과 비전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동북아 지정학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의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 공통의 가치가 없는 공동체는 구현될 수 없으며 그 공간에는 자국의 이익과 강대국의 지역전략만이 작동할 것이다. 분단 6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남북한의 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그것의 책임을 남북 당국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구조로서의 강대국의 지역전략과 자국 이익 중심의 국제정치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오히려 현실에 발을 딛지 못한 공상일 수 있다.

2.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건설

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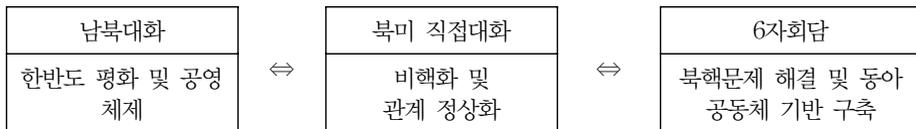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건설의 선결조건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이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다.²⁸ 현재 북핵 문제는 해결의 단초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²⁸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축이 북핵문제의 해결만으로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적으로 최근 벌어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극명하게 보여주듯이 남북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한반도 평화공영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정부의 상호 불신의 해소, 미국과 중국의 대한반도 지역전략의 전환, 남북한의 심각한 국력 격차의 해소, 북한정부의 개방·개혁적 방향으로의 정책 선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및 동북아지역의 ‘준냉전적’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상징적 계기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며, 이와 연동된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이다. 이는 세계적 문제인 핵 확산의 성공적 예방과 유일한

있다. 6자회담은 재개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실타래를 풀어야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진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본원칙은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선순환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 해결이어야 한다. 즉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국제적 현안이 된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을 조화롭게 결합시켜야 한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북미 및 북일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별도의 프로세스로서 ‘2+2(남·북+미·중) 평화협정’을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삼중연계전략(three track)’을 구사해야 한다. 한·미간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도출하고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남북대화를 실행함으로써 ‘남북대화(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북미직접대화(비핵화 및 관계정상화) - 6자회담(북핵문제 해결 및 지역공동체 초입구조)’이라는 전략적 배열을 구성하는 것이다.²⁹

<그림 2>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삼중연계전략’



이 전략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그림 3> 참조). 이미 6자회담의 2·13선언에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working group)에 합의했고, 한반도 평화체제 직접 관련 당사자(4자) 간 회담에 대한 진전된 공감대가 있으며, 남북 정상간 10·4선언에 근거해서 3자 또는 4자회담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정신을 재확인한다면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설계도는 이미 만들어진 것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전제조건으로서 북핵 문제 해결이 남아 있을 뿐이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로 북미 간에

분단국가의 제도적 평화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없이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의 구축은 불가능하며, 역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축의 현실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²⁹ 김중욱,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시아 외교전략과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 한국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8권 1호 (2009), pp. 26-27.

즉 아태지역을 경제영토로 설정하여 새로운 비전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공영체제’의 구축이다. ‘공영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된 도약경제로서 한반도의 신 성장 동력 및 지역 확대의 기반을 만들어줄 것이며, 북한경제의 현대화를 통해 남과 북의 보완 경제협력 구축을 가능케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을 ‘유사영토’로 개척하는 공동번영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성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지경학(地經學)적 상황을 고려하면, 동남아시아 지역에 남북한이 공동 진출하여 쌍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위로는 극동지역(연해주, 시베리아 등)과 동북 3성에 대한 공동협력 및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북한의 변화와 세계경제의 편입을 가속화하는 효과도 동시에 만들어낼 것이다.

이를 위해 추진전략으로서 ‘점(點)→ 선(線)→ 면(面)’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다.³³ ‘점’은 접촉과 소통의 확대로서 개성, 금강산, 신의주, 라진-선봉을 들 수 있다. ‘선’은 호혜적 산업협력 거점의 확보 차원으로 서부 축은 개성-해주공단과 평양-남포를 잇고, 동부 축으로는 금강산과 청진-원산을 잇고, 북부 축으로는 나진-선봉지역(극동지역 거점)과 신의주(동북 3성 거점)를 잇는 것이다. ‘면’은 이러한 협력의 결실로서 경제통합기반 구축을 위한 SOC(에너지, 교통·물류 등)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전략에 입각해서 ‘공영체제’를 위한 5대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5

그것은 국제공동체의 인정과 원조에 의해 지원되었지만, 기초적인 제도와 국내적 정통성은 결여된 발전과정을 거친 정부를 의미했다. Robert Jackson, *Quasi-states: Sovereignt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Third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 21-26. 이런 의미에서 세계화 이후 탈영토성이 강화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영토적 개념은 희미해졌으며, 다양한 초국가적·초정부적 네트워크에 의해 영토적 구획을 횡단하는 ‘외부와 의 통로가 승승 뚫린(proust)’ 불명확하고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민병원, “세계화시대의 네트워크 국가,” p. 490. 따라서 ‘유사영토’는 행위자들에게 모든 영토에서 다함께 행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계적 차원의 ‘유사영토’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에 의하면 전 세계는 한반도 공영경제체제에게 ‘유사영토’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 ‘유사영토’는 여전히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행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지만, 경제적 영역에서는 모두가 행위 할 수 있는 ‘유사영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세계화가 ‘아태화’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공영경제체제 구축을 통해 아태지역을 경제영역의 ‘유사영토’로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³³ 중국 대외개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점(點)-선(線)-면(面)’ 정책으로, 경제특구법(點)은 폐쇄된 중국 대륙을 외부세계와 연결하는 ‘창구’로서의 역할 및 기존 계획경제시스템을 개혁하고 시장시스템을 도입하는 ‘실험장’ 역할을 담당했다. 경제특구의 성과에 따라 연해 항만도시(線)가 개방되었고,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面)은 전면적인 개방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원동욱·안병민, 『북한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연계교통망 구축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총서 2008-17 (2008), p. 113.

대 협력사업은 우선, 에너지 협력사업이다. 남북 차원에서 중유 및 전기 송전, 탄광 설비 현대화를 통한 북한 주요 4대 발전소(북창·평양·수풍·장진강) 개보수와 함께 송전시설 및 체계를 개선하고, 천연자원 공동개발³⁴을 추진하고, 동북아 차원에서는 에너지를 공동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다자에너지 협력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³⁵ 둘째, 교통 및 물류 망 협력사업이다. 이것은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³⁶ 철도 및 수송망 연결을 통한 동북아 물류체계 구축,³⁷ 해로를 통한 동북아 물류체계 구축³⁸ 등이다. 셋째, 정보통신(IT) 협력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영체제’가 네트워크 국가의 위상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 분야는 경협지역의 통신지원, 통신협정 체결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정보통신센터 설립 및 IT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통신 협력기반 구축사업 등이 필요하다. 넷째, 경제협력지대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점-선-면’으로서 개성, 해주, 금강산을 점으로 하여 동서 양축의 선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다. 다섯째, 관광산업 협력 사업이다. 이는 ‘개성-평양-백두산’ 관광벨트와 ‘금강산-칠보산-백두산’ 관광벨트를 구상할 수 있으며, 비무장지대의 친환경적 관광지대화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구상은 동북아지역 관광 허브 구상과 연계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³⁴ 한에 매장된 360여종의 천연자원 가운데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원은 200여종으로 마그네사이트 매장량 세계 제1위, 텅스텐·몰리브덴·흑연·중정석·형석 등 7종은 세계 10위권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연합뉴스』 2006년 3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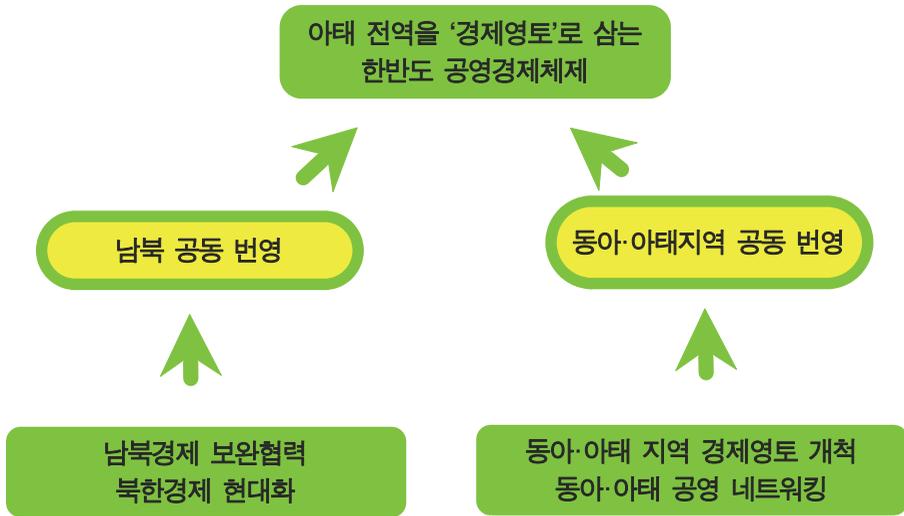
³⁵ 동북아 다자에너지 협력체제가 만들어진다면, 역내 다자안보협력체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주요 전쟁 물자였던 석탄과 철강의 공동관리를 통해 경제 및 안보협력체로 발전했던 것을 하나의 경험적 사례로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송은희, “동북아 다자에너지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26집 3호 (2008), p. 19.

³⁶ 철도는 ‘개성-평양-신의주(410km, 2조 2천억 원)+TCR’, ‘평양-원산-두만강(920km, 4조 8천억 원)+TSR’ 라인, 도로는 ‘개성-평양-신의주(410km, 4조원)+AH1(일본-부산-북한-신의주-중국-인도 동남아 경우 터키 이스탄불)’, ‘온정리-원산-두만강(800km, 8조원)+AH2(일본-부산-동해안-북한을 경우 러시아 대륙 횡단)’ 등의 방안이 있다.

³⁷ TCR 및 도로(부산-신의주-압록강대교-동북3성-유럽)를 통한 ‘압록강 프로젝트’(동북 3성은 중국 국내 총생산의 9.4%를 차지, 2008년 기준)와 TSR 및 도로(부산-서울/속초-원산-나진-하산/모스크바-유럽)를 통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있다.

³⁸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첫째, 인천-남포/부산-나진으로 하역이 효율적이며, 둘째, 부산-선봉(유류·천연가스), 송림(제철), 흥남(석탄·시멘트), 청진(지하자원)이 있고, 셋째, 인천-해주 구간으로 시멘트 및 기타 경제협력의 루트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 아태 전역을 ‘경제영토’로 삼는 ‘공영체제’



이 구상이 점진적·단계적으로 실천된다면, 북한경제의 현대화 및 국제사회로의 편입이 가능하며 한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영체제’이다. 이 ‘공영체제’는 경제와 평화를 연계하는 것이며, 경제사업의 파급 효과는 동아시아지역으로 확장될 것이며, 확장된 경제력은 아태 전지역을 ‘경제영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그림 4> 참조).

IV.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 공동번영권의 ‘네트워크 국가’

1. 21세기 형 ‘네트워크 국가’: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에 기여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의 구축을 통해 한국은 21세기 형 ‘네트워크 국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³⁹ 이 방향은 한반도의 통일 및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에 촉진자로

³⁹ 백영서는 ‘네트워크 국가’에 대해 “근대의 적응, 특히 전 지구적 자본주의 현 단계의 단계적 적응에 불과할 뿐, 중장기적인 근대극복의 지향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복합국가론’을 제안했다. 백영서, “동아시아론과 근대적응·근대극복의 이중과제,” pp. 46-51. 이는 타당한 비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극복의 과제도 현재의 극복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한 현재를 반영하는 다양한 변화에 근거해서 극복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트워크 국가’론은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남북한의 평화와 공영체제로의 전환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극복과 냉전적 패러다임의 최종적 해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체결이 성사된다면 국제적 제도와 평화 정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결과물은 21세기 새로운 문화적 대안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환경과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차원의 이니셔티브 확보 및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의 난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동아시아의 근대역사로 인한 지역적 정체성의 부재를 해결할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축과정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의 문명적·문화적 ‘패치워크’를 촉진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문명은 “외부 문명권에서 들어온 모든 인간들과 모든 문화조각들을 유교적 바탕 위에서 유교적인 실로 꿰매고 유교적인 접착제로 붙여 더욱 강력한 완전품으로 재생산된, 그리고 매일 재생되고 있는 ‘짜깁기’” 문명이었다.⁴³ 이러한 패치워크의 능력으로 인해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르고 세계의 권력과 경제력이 집중될 만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업생산력과 기술력을 축적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⁴⁴ 이러한 동아시아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동아시아(인) 정체성을 서유럽에 의해 구성된 것을 수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재창안(reinvention)의 차원에서 새롭게 조직”해야 한다.⁴⁵ 이 과정에서 한반도 공영체제 구축의 창조적 과정은 동아시아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공동체 구성에 있어 위계적 구조화의 문제와 ‘중국위협론’⁴⁶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존재 문제이다. 이 세 가지는 맞물려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느 입장인지 간에 위계적 구조화의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이 문제의 ‘결절지역(結節地域)’은 한반도이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접점이며, 동아시아지역 불안정의 중심임과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 발전의 추동력이며 발원지로서의 이중적 함의를 갖고 있다.

⁴³ 황태연, 『공자와 세계 1: 공자의 지식철학 (상)』, p. 28.

⁴⁴ 위의 책, p. 41.

⁴⁵ 임춘성, “동아시아인의 정체성 형성, 장애와 출구: 비판적 동아시아담론을 중심으로,” p. 283.

⁴⁶ ‘중국위협론’의 실체는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발전하면 언젠가 서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상상적 예측 속에서 전개된 부정적 발로이며, 서양의 동양에 대한 인종우월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차별의식의 표현이며, 탈냉전·탈근대 시대에도 국제정치체제의 경쟁과 대결의식을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기제의 한 축으로 볼 수 있다. 고성빈, “‘중국위협론’에 대한 비판적 사유: 허위의식의 그물,” 『진보평론』, 제44호 여름호 (2010), pp. 189-204.

따라서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의 구축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위계적 구조화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역할, 미·중의 대립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중재역할,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영역 확대의 출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서 소외되었던 북한, 대만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⁴⁷ 한반도 공영체제의 구축은 이미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문제의 해결은 대만문제 해결의 긍정적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냉전적 질서를 공동체 질서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과정은 북한과 대만의 두려움을 완충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경제와 사회적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북한과 대만이 정치·안보적 측면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국 차원에서 국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공영체제와 동아시아 공동체는 서로 선순환 구조에 놓이게 될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공동체 논의는 좁은 의미에서 경제적 통합이라는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 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구조적 제약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열린 지역주의와 중층적 지역질서를 추구해야 한다.⁴⁸ 열린 지역주의와 중층적 지역질서의 추구에 있어 한반도 평화공영체제를 추진하는 ‘네트워크 국가’로서 한국은 지역공동체 구성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제공하는 촉진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아태지역 공동번영의 ‘중추(hub)’로서 지역 위상 구축

APEC은 태평양을 횡단하는 유일한 지역체제로서 지역 지도자들 양자 또는 다자적 모임의 유용한 거점이었으며,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수출 지향적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⁴⁷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칫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협력체제 형성에 있어서도 고립된 섬으로 남길 우려를 낳고 있다. 실질적으로 ‘아세안+3’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과 같은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와 그 추진과정에서 북한은 소외되어 있으며, 오히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환경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동운, “동아시아 공동체와 남북한 상생의 지역협력,” 『OUGHTOPIA』, 제23권 1호 (2008), p. 121.

⁴⁸ 백영서, “동아시아론과 근대적응·근대극복의 이중과제,” p. 42.

아태지역 간 경제적 연계와 무역은 더욱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볼 때, 아태지역의 느슨하지만 포괄적인 ‘지역체계(regional architecture)’⁴⁹는 이 지역 국가들의 번영과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환태평양 지역체계는 그 중심에 ASEAN+3을 배치하고, EAS(East Asia Summit)를 확대하여 국가 간 상호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며, APEC은 거대한 경제지대로 존재하여 서로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성된 아태지역은 ‘ASEAN+3+3’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⁵⁰

단 동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공동체 구성은 아태 지역의 광범위한 제도적 구축 계획과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지역 차원에서 미국의 존재와 중국의 급격한 부상,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의 심화 등에 기인한다. 문제는 미국의 위상과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이다. 미국은 이 지역의 정치·경제적 관계의 변화과정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에 도전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보장 또는 연계 없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보편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 협력의 거점을 확보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점이다.⁵¹

따라서 아태지역은 당분간 복잡한 지역체계의 혼성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태지역의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과 지역 차원의 공통이익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접근과 계획을 실천할 것이다. 즉 아태지역은 ASEAN, ASEAN+3, EAS, APEC 등 네 가지가 상호 중층적으로 결합되는 지역체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공영체계 건설을 통해 아태지역의 중추로서의 지역 위상을 추구해야 한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랜드브리지(Land Bridge)로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축의 장애이자 출구로서, 탈냉전 이후 냉전적 대립의 최전선이자 해결의 최종지역으로서, 아태지역 경제교류의 장벽지역이자 경제교류의 십자로로서의

⁴⁹ ‘지역 체계’라는 용어는 상이한 지정학적 경계와 지역의 기능적 협력의 문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집단적으로 지역의 번영, 평화와 안정을 만들 수 있는 통일성 있는 지역 조직과 제도의 네트워크, 양자·다자 협정, 대화 포럼 네트워크 등 관련된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지역은 이런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ASEAN, ASEAN+3, EAS, APEC 등이 혼합적·이중적·중층적 결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복잡함으로 인해 유럽연합 구성과정의 ‘스파게티 그릇(spaghetti bowl)’ 효과와 비교하여 ‘국수 그릇(noodle bowl)’ 효과로 비유되기도 한다. Richard Weixing Hu, *Building Asia Pacific Regional Architecture: The Challenge of Hybrid Regionalism*, pp. 14~15.

⁵⁰ *Ibid.*, p. 26.

⁵¹ *Ibid.*, pp. 15-16.

적 흐름에 대응하여 아태지역을 ‘유사영토’로서의 경제영토로 활용하는 아태지역의 중추로서 네트워크 국가의 비전을 추진해야 한다. 즉 ‘초국가적 공간’으로서 아태지역을 경제영토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 ‘초국가적 공간’은 문명, 인종, 문화, 지정학, 물류, 인간 이동 등 각 수준별로 형성되는 중층의 유동적 공간이며, 문화와 인적 교류의 범위, 정치·군사적 지배권, 제국적 질서로부터 최근의 사이버공간, 이주 네트워크, 다문화공동체, 국가 정부 간 협력체, 비정부기구의 연대 등을 포괄한다.⁵³ 따라서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탈경계적 현상, ‘이종적 네트워크’, 인간과 사물의 교류와 이동, 경제적 교류 네트워크의 복잡성 등에 대응하여, 한국이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제공하는 축진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국가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2009년 세계무역순위 10위, 수출순위 9위이며,⁵⁴ 씨티그룹에 의하면 ‘2010~2050년 중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위 10개국’ 통계에서 한국이 2020년 세계 10위권 진입, 2030년 5위, 2040~2050년 4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⁵⁵ 이런 추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공영체제로 진입할 수 있다면 평화롭게 번영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아태지역을 경제영토로 활용하는 새로운 비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의 구축과정은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정과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구체적 실천 없이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의 구축은 불가능하며, 역으로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의 단계적 실현과정은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추동력이 될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의 단계적 실현은 분단과 대립의 냉전질서를 평화와 공존의 탈냉전적 질서로 전환시킴을 의미하며, 이는 남북한이 동아시아지역에서 도덕성, 규범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며, 동시에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정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 속에서 실현되는 한반도 평화공영체제는 대륙과 해양을 잇고,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완화하고, 새로운 경제지대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

⁵³ 박상수, “한국발 ‘동아시아론’의 인식론 검토,” pp. 166-167.

⁵⁴ 『머니투데이』, 2010년 11월 29일, <<http://news.mt.co.kr/mtview.php?no=2010112915373756383&type=&>> (검색일: 2011.4.10).

⁵⁵ 『연합뉴스』, 2011년 3월 1일,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11.3.1).

서 그 자체 아태지역에서 네트워크의 중추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공영체제를 통한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공동체 구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아태지역의 공동번영 네트워크는 21세기 한국이 추진해야 할 국가비전이라 할 수 있다.

분단의 잔흔이 분쟁의 현실화로 나타나는 한반도, 탈냉전 이후에도 냉전적 질서가 견고하게 복원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수많은 복잡성과 이질성에 의해 갈 길이 먼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현재적 조건을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지역은 제도적인 평화체제의 부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아시아 패권경쟁, 역내 세력으로서 중국과 일본의 세력 다툼, 국지세력으로서 남북한 경쟁과 갈등 등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첩되어 매우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이 되어버렸다.⁵⁶ 이와 같이 기존의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을 이해한다면, 한반도의 평화공영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난제 중에 난제로 이해될 것이다. 변화하는 세계와 동아시아 지역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 출발은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의 실천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시스템화 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안정과 아태지역의 공동번영 네트워크를 추동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공영체제가 추구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소극적 의미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내면적으로나 실제 삶에서 평화로움을 경험하는 적극적 의미를 내포하며, 제도적으로는 남북한의 군사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해결해가는 가치이며 인간을 도구화하는 기술주의나 패권주의에 도전하는 생명을 존중하는 접근이다.⁵⁷ 한반도 평화공영체제가 추구하는 공동번영은 단어 그 자체의 의미처럼 남북한 공동의 번영을 넘어서서 동아시아 지역과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호혜성에 근거한 번영을 추구한다. 또한 국가차원을 넘어서 국가 내부 행위자, 초국가적 행위자, 국가 간 행위자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의 확대와 심화에 기초한 번영을 의미한다.

21세기에는 평화공영체제를 지향하는 한반도, 지역적 정체성·경제적 호혜성·문화적 유대감으로 형성되는 동아시아 공동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등장한 아태지역체제가 상호 선순환하는 국면으로 진입해야 한다. 그것은 개척자의 프론티어 정신이 필요하다. 전인미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개척정신이 필요하다. 단지 이

⁵⁶ 이동윤, “동아시아 공동체와 남북한 상생의 지역협력,” p. 124.

⁵⁷ 박명규, “분단체제, 세계화 그리고 평화민족주의,” 『시민과 세계』, 제8호 (2006), p. 429.

인만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인간, 경제적 가치 중심의 국가를 넘어서서 평화와 인본, 소통과 화합에 기초한 공동체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말이다.

■ 접수: 4월 15일 ■ 심사: 6월 7일 ■ 채택: 6월 13일

참고문헌

1. 단행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스마트파워위원회 지음·홍순식 옮김. 『스마트 파워』. 서울: 삼인, 2009.

최진욱. 『국민들의 대북인식 변화와 대북정책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10.

황태연. 『공자와 세계 1: 공자의 지식철학(상)』. 파주: 청계, 2011.

Grotto, Andrew·Cirincione, Joe. *Orienting the 2009 Nuclear Posture Review: A roadmap*. CAP. November 2008.

Jackson, Robert. *Quasi-States: Sovereignt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Third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Strange, Susan. *The Retreat of the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Weixing Hu, Richard. *Building Asia Pacific Regional Architecture: The Challenge of Hybrid Regionalism*. Center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dies. The Brookings Institution, July 2009.

2. 논문

고성빈. “중국위협론’에 대한 비판적 사유: 허위의식의 그물.” 『진보평론』. 제44호 여름호, 2010.

김상배. “네트워크 지식국가론의 모색.” 『네트워크 지식국가』. 서울: 을유문화사, 2007.

김종욱.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시아 외교전략과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 한국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8권 1호, 2009.

류준필. “분단체제론과 동아시론.” 『동아시아, 인식지평과 실천공간』. 서울: 아연출판부, 2010.

민병원. “세계화시대의 네트워크 국가.” 『네트워크 지식국가』. 서울: 을유문화사, 2007.

박명규. “분단체제, 세계화 그리고 평화민족주의.” 『시민과 세계』. 제8호, 2006.

박상수. “한국발 ‘동아시아론’의 인식론 검토.” 『동아시아, 인식지평과 실천공간』. 서울: 아연출판부, 2010.

백영서. “동아시아론과 근대적응·근대극복의 이중과제.” 『창작과 비평』. 제36권 제1호, 2008.

Conception for System of Peace and Co-prosperity in Korean Peninsula and the East Asian Community:
Network State to Promote Peace and Co-prosperity in Asian-Pacific Region

Jong-Wook Kim

This article will find ways to fulfill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the ROK's future vision. Inter-Korea issues should be approached in association with the changes of South-North relations as well as Northeast Asia geopolitics, the deepening in procedure and practice on "East Asian Community" initiative, the on-going changes of politics and econom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ter-Korea issue has been internationalized, regardless of the will of both parties. East Asian Community conception becomes an important practical issue in its local politics beyond the level of the general discourse. The deepening of globalization has brought economic up-grades in the East Asia region including the Asia Pacific region. The Changes in this region have provided new opportunities for the ROK. However, both the opportunity factors and the threat ones coexist in the East Asia region. Unless these challenges can be overcome,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are unlikely to be achieved. Therefore, the configuration of the East Asian community should be started with building the system of peace and co-prosperity in Korean Peninsula. Building the system of peace and co-prosperity in Korean Peninsula will itself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configuration of the East Asian community. The connective impacts on among the system of peace and co-prosperity in Korean Peninsula, the East Asian Community, and the Asia-Pacific region should be simultaneously considered as one. To make this happen, ROK ought to pursue a network state, which is a pivotal country to provide a network-centric for Asia Pacific region. The network state is a new vision takes advantage of 'quasi-economic territory' to Asia Pacific region. As a result, ROK should play a crucial role in building of the system of peace and co-prosperity in Korean Peninsula, in constructing of East Asia's regional identity, economic reciprocity, and cultural bond, in activating of economic development of the Asia Pacific region. It is a core vision in the system of peace and co-prosperity in Korean Peninsula.

Key Words: East Asian Community, Network State, System of Peace and Co-prosperity in Korean Peninsula, Quasi-territory, Hub State